

文-재계 ‘부품산업 국산화-긴호흡 지원’ 공감대 나눠

대통령-기업-경제단체 긴급 간담회

단기·장기적 조치 필요성 공감
조달망 다각화의 중요성 강조
대외의존도 낮추려는 노력 필요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30대 기업 대표들을 초청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하는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자산 10조원 이상 30개 기업, 4개 경제단체가 머리를 맞대고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대책을 모색했다. 그리고 정부와 기업간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부품산업의 국산화 및 ▲부품산업 국산화에 따른 정부의 긴 호흡 지원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문 대통령과 자산 10조원 이상 30개 기업-4개 경제단체 대표 초청 긴급 간담회’ 후 브리핑을 통해 “기업인들은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

(문 대통령이 밝힌) 단기적·장기적 조치의 필요성에 공감했다”며 “(기업인들은) ‘중장기적으로 이번 조치가 양국간 경제 협력 등에 도움이 되지 않음을 민간 차원에서도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이렇게 말했다.

고 대변인은 “기업인들은 부품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부품 국산화에 대한 정부 의지에 대해 공감의 뜻을 나타냄과 동시에 장기적 안목과 긴 호흡의 정부 지원을 당부했다”며 “특히 제조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초산업이 탄탄해

야 한다’며 납품업체와 협력 강화를 통해 ‘해당 산업의 뿌리를 내리는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고도 했다.

고 대변인은 계속해서 “(기업인들은) 또 수입선 등 조달망 다각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며 “특정 국가의 의존도를

낮추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특히 화학분야에 있어서는 강점이 있는 러시아·독일과의 협력 확대를 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과 재계간 긴급 간담회 때 ▲단기간 내 국내 부품·소재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전략부품산업의 M&A(인수합병)’, ▲미래기술 발굴을 위한 R&D 투자, ▲신규화학물질 생산에 따른 환경규제의 어려움 등에 대한 논의 등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번 긴급 간담회 때 기업인들에게 “최대한 정부가 뒷받침할 테니 대외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주요 기업 간 공동기술 개발, 대·중소기업 간 부품기술 국산화 협력 확대 등을 통해 한국경제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계기로 삼아 달라”고 당부했다.

/우승준 기자 dn1114@metroseoul.co.kr

너 죽고 나 죽는 ‘日 수출규제’ 진짜 이유

‘한반도 평화기류 반하는 것’ 지적 대북제재와 연결, 근거없는 배경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 기업 수출규제 배경으로 ‘근거가 불명확한 대북제재’를 꼽는 가운데, 일본 정부의 이러한 행보는 ‘한반도 평화기류에 반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우선 일본 국영방송 NHK는 지난 9일 익명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원재료는 화학부기인 사린 등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으나, 일부 대한민국 기업이 발주처인 일본 기업에 서둘러 납품을 강요하는 일이 일상화됐다”며 “(이에)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를 문제로 봤고, 일본기업 현장 검

사등을 통해 개선을 요구했다”고 했다. 이어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군사전용 기능물자가 대한민국에서 대량살상 무기를 개발하는 다른 나라에 넘어갈 위험을 배제할 수 없는 우려가 조처를 단행한 배경이 됐다”고 부연했다.

익명의 일본 정부 관계자가 밝힌 사린가스는 휘발성이 큰 독성신경가스로, 독성이 청산가리(독성물질)보다 500배나 높은 것으로 정평이 났다. 사린가스의 위험성은 상당하다. 옴진리교(당시 신흥 종교단체)가 지난 1995년 일본 도쿄 내 지하철 테러에 이 가스를 사용했고, 당시 이 가스로 인해 12명이 사망하고 약 1000명이 이상징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뿐인가. 아베 신조 일본 총리대신 역시 지난 7일 후지TV 토론회 때 “우리나라 수출규제 관련) 대한민국이 ‘정직하게 수출 관리를 하고 있음’을 확실히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는 (반도체 소재 물질 등을) 내보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대북 제재를 지키고 (북한에 대한) 무역관제도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하다”고 부연했다.

일본이 언급한 우리나라 수출규제 이유에 남북은 명확하게 반박했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자산 10조원 이상 30개 기업-4개 경제단체 대표 초청 긴급 간담회’ 때 “일본 정부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오전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의 공식환영식에서 의장국인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와 악수한 뒤 이동하는 모습. /연합뉴스

경제에 타격을 주는 조치를 취하고, 아무런 근거 없이 대북제재와 연결시키는 발언을 하는 것은 양국의 우호와 안보 협력 관계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역시 10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자원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일본 정부는) 근거 없는 주장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며 “일본의 의혹 제기는 대한민국에 대한 국제사회 평가와도 상반된다. (지금까지) 일본을 포함한 어느 나라도 (대북제재 위반 관련) 의문을 제기한 바 없었다”고 했다.

북한은 일본을 향해 원색적인 비난을 가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0일 ‘친일 매국 행위가 초래한 사태’라는 제목의 정세 해설 기사를 통해 “정치난쟁이의 가스로운 객기”라며 “오만방자하다”고 일본의 우리나라 수출규제에 불만을 드러냈다. 이어 “지난날 우리 민족에게 저지른 천인공노할 죄악에 대해 조금도 인정하지 않고 사죄와 배상을 한사코 외면하면서 과거사 문제를 덮어버리고 다시금 침략의 길에 나서려는 일본 반동들의 책동이 얼마나 엄중하고 무분별한 단계에 이르고 있는가”라고 부연했다. /우승준 기자

올 상반기 사회적 기업에 4000억원... 문제는 자생력

제품구매하는 생태계 먼저 구축해야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고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사회적 기업에 공급된 자금은 총 4017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1% 이상 증가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대출 보증 투자 등의 자금공급 방법보다 제품구매 등으로 사회적 기업의 자생력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며 사회적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는 생태계가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김태현 사무처장을 주제로 ‘2019년 제2차 사회적금융협의회’를 개최했다. 지난 4월 열린 제1차 사회적금융협의회에서 마련한 과제들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사회적 금융공급실적을 평가했다.

사회적금융은 사회적 가치 실현과 재무적 이익을 함께 추구하는 금융으로, 사회문제의 효과적 해결을 위해 투자 용자 보증 등 회수를 전제로 사회적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운영된다.

<2019년 상반기 사회적기업 공공부문 지원실적>

유형	공공기관	'19년 집행예정액	6월말 집행액(기업수)
대출	서민금융진흥원	50	19 (36개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500	241 (144개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00	9 (29개사)
	신협	300	107 (194개사)
	새마을금고	10	0 (0개사)
보증	신용보증기금	1,000	679 (411개사)
	지역신용보증재단	150	66 (147개사)
	기술보증기금	700	725 (167개사)
투자	한국성장금융	200	104 (8개사)
	한국벤처투자	220	152 (17개사)
소계	-	3,230	2,102 (1,144개사)

/자료=금융위원회

앞서 금융위는 올해 사회적기업 자금 목표 공급목표액을 2340억원(2018년)에서 3230억원으로 확대했다. 사회적 경제기업의 업력이 짧고 규모가 작아 금융회사를 통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사회적기업 1144곳에 2102억원의 공공자금이 공급됐다. 지난해 지원된 금액은 1937억원으로 165억원 늘었다. 올해 상

반기 대출은 목표 대비 43.7%인 376억원, 보증은 79.5%에 달하는 1470억원, 투자는 61.0%인 256억원이 각각 집행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상공인진흥공단과 새마을금고를 통해 신규대출상품을 출시하고, 성장금융과 벤처투자 등 사회 투자펀드를 통해 자금을 차질 없이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은행권은 올 들어 지난달 20일까지 사회적기업에 총 1330건, 1915억원의 자금

을 공급했다. 1건 당 1억4000만원 수준이다. 지난해 전체 실적(3424억원)의 55.9% 수준으로, 지난해 상반기(1718억원) 대비로는 11.5% 증가한 규모다.

금융위는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이달 중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공공민간자금을 사회적 경제기업에 전대·투자하는 기관을 알지 못해 자금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 기업의 실제 사업수행 여부와 재무상황을 점검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한다. 오는 9월까지 사회적 금융협의의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사회적 경제기업의 신용 대출 보증정보를 공유하고, 사회적 가치정보와 투자정보 등으로 정보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마련한 정보는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리스크 관리와 지원대상인 기업을 발굴하는데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리가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부의 일자리 확대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기업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자생력을 키워야 한다는 설명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0일 기준 사회적 기업은 2208곳으로 지난 2015년 1460개, 2017년 1825개사로 꾸준히 증가해 왔다.

하지만 현재 사회적 기업의 절반가량은 영업손실을 내고 있는 상황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사회적 기업의 영업이익 흑자기업 비율은 2015년 24.4%, 2016년 50.1%, 2017년 55.5%로 증가하는 추세지만 여전히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자금 공급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업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은행권의 지원유형을 살펴보면 대출이 1868억원(97.6%)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기부·후원 25억원(1.3%), 제품구매 17억원(0.9%), 출자 5억원(0.2%)이 뒤를 이었다.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는 금융회사조차도 제품을 구매하는 비중이 1%가 채 되지 않는 설명이다. 사회적 기업의 지속가능성으로 살아남기 위해선 제품 판매 등을 통한 수익이 꾸준히 창출돼야 하지만, 환경상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내유리 기자 yul115@